



배포일자 : 2026년 8월 14일(금)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웨딩플래너가 만든 그림자거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웨딩플래너 주도의 웨딩서비스 시장, 업계가 겪는 불공정거래 문제 점검
- 오세희 위원장 “웨딩산업 제도개선, '소비자 보호'를 넘어 서비스 제공자인 '제휴업체 보호'까지 넓혀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웨딩산업 거래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 <웨딩플래너가 만든 그림자거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최근 혼인 건수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웨딩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 그동안 시장 내 거래구조는 예비부부와 웨딩플래너(결혼준비대행업체) 간의 계약에만 집중되어왔다. 이로 인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제휴업체(드레스, 헤어·메이크업, 예복, 한복 등)가 겪는 불공정거래와 피해 문제는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과 권향엽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 예복, 한복, 드레스, 헤어·메이크업 등 제휴업체,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6.7)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총 5,681건에 달한다. 신청사유도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청약철회 등 계약관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 참가격 사이트를 통한 예식장 및 결혼서비스 준비대행 가격정보 공개 등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웨딩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웨딩플래너 주도형 거래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수수료 및 부당한 대금정산 ▲불투명한 가격구조 ▲불분명한 책임 소재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나친 저가 패키지 경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관련 제휴업체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결국 소비자에게 추가금 및 옵션 비용 발생이라는 피해로 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세희 위원장은 “웨딩플래너 간의 과도한 저가 패키지 경쟁 과정에서 관련 제휴업체에 비용과 부담이 전가되고, 정당한 대가와 제대로 된 정산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라며, “결혼준비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물론, 관련 제휴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웨딩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끝>